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844
----------	------

발의연월일 : 2025. 1. 24.

발 의 자 : 추미애 · 신정훈 · 이성운
박은정 · 김준혁 · 최민희
오세희 · 강선우 · 이재강
윤종균 · 정일영 · 안규백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시행령, 「군인 징계령」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보직에서 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군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 시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 중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공관병 갑질 사건, 12·3 비상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경우와 같이 고위급 장성이 비위를 저지른 경우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가 부족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징계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어 보직해임 및 징계 심의를 하지 못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부족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징계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직해임 및 징계에 대한 입법 미비를 해소하고 비위 행위자가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처벌과 불이익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7조의2제3항·제4항·제5항 신설 등).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5항) 중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로 한다.

③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무장교가 보직되어있는 기관 또는 부대에서는 위원 중 1명을 법무장교로 한다. 다만, 법무장교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아니더라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이거나 선임자인 장교의 수가 3명에 미달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이거나 선임자인 장교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교인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하고, 위원 중에 장교가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률·심리학·인권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지명 시 국방부장관이 사고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면 국방부차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58조의2에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3명에 미달하여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교인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하고, 위원 중에 장교가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률·심리학·인권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지명 시 국방부장관이 사고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면 국방부차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⑤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2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장교인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하고, 위원 중에 장교가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률·심리학·인권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지명 시 국방부장관이 사고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면 국방부차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⑥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보직해임) ①·② (생략) <u><신 설></u>	제17조의2(보직해임)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무장교가 보직되어있는 기관 또는 부대에서는 위원 중 1명을 법무장교로 한다. 다만, 법무장교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아니더라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u>
<u><신 설></u>	<u>④ 국방부장관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이거나 선임자인 장교의 수가 3명에 미달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이거나 선임자인 장교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다음 각</u>

<신 설>

③ · ④ (생 략)

⑤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 심의 등에 필요한 사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
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
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해
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교
인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하고, 위원 중에 장교가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지명하
는 사람으로 한다.

1. 판사 · 검사 ·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한 사람

2. 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 ·
행정 · 법률 · 심리학 · 인권 관
련 분야 등의 교수 · 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보직해임심의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지명
시 국방부장관이 사고로 권한
을 행사할 수 없으면 국방부차
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⑥ · ⑦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⑧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
정된 사항 외에 보직해임심의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2(징계위원회) ①·②
(생략)
<신설>

위원회-----

-----.

제58조의2(징계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방부장관은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의 수가 3명에 미달하여 제1항
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계처분등
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
교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
로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
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위
원회의 위원장은 장교인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하고, 위원
중에 장교가 없는 경우에는 국
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한 사람

2. 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
행정·법률·심리학·인권 관

<신 설>

<신 설>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① .

② (생 략)

<신 설>

런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지명 시 국방
부장관이 사고로 권한을 행사
할 수 없으면 국방부차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⑤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민간
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방부장관은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5명에 미
달하는 경우에는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
간위원으로 위촉하여 항고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장교인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하고, 위원 중
에 장교가 없는 경우에는 국방
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p><u><신 설></u></p> <p>③ (생 략)</p> <p><u><신 설></u></p>	<p>1. <u>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u></p> <p>2. <u>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률·심리학·인권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u></p> <p>④ <u>제3항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지명 시 국방부장관이 사고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면 국방부차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u></p> <p>⑤ <u>(현행 제3항과 같음)</u></p> <p>⑥ <u>그 밖에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	--